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

김미경*(희망제작소)

우리에게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 정치교육의 체계와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치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독일은 정치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재단, 교회, 노조, 시민단체 등 각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치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차원에서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찍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학습주체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한편 학교안과 밖의 교육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모델 사업들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치교육의 그 자체의 자발성과 생명력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화를 위해 교육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독일 정치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간등록 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시기에도 순발력있게 강연회,

대화 씨클 등을 통해 정치교육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내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교육은 지식습득을 넘어 생활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인생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제도화는 다양한 시민교육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 시민사회단체의 교육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정치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획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다. 학교, 공공기관 등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들은 지금까지의 이론 중심의 고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까지 전개해 온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단체

I. 서론

한국의 시민사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의 성숙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정치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등에서 정치의식의 성숙을 위한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독일의 전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주의자 없이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독재체제의 역사적 경험으로 독일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를 동시대인과 후손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명심시키는데 국가 역량의 상당 부분을 기울인다. 정치교육은 이 역사적 결론을 체제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자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독일 정치교육이 그나마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국가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한 점에 있다.

독일은 정치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재단, 교회, 노조, 시민단체 등 각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치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차원에서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도 정치교육의 명맥을 이어왔으며, 국가 중심의 일방적인 정치교육으로부터 정치교육의 역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 정치교육의 체계와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치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정치교육론

1. 정치교육의 의미

1) 정치교육의 개념

정치교육의 개념은 물론 성격과 영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시대와 가치체계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성격이 변하였지만 대체로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내면화하고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확충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공통점이다.¹⁾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정의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²⁾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집단, 조직, 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청소년 및 성인이 정치 및 사회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모든 교육시설의 조치를 가리키는 집합명칭이다. 이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학교에서 특정한 교과와 수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교과에 두루 걸치는 수업원리로서 행해지거나 아니면 학교밖의 제도를 통해 행해진다.

실레(Schiele)에 의하면,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목표는 한마디로 전쟁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건설과 성숙된 시민의식의 고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시민들에게 정치·사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 및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1) 독일의 경우는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동일어로 미국은 정치교육 대신 민주시민교육으로 영국은 정치교육과 시민교육 등 양자를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민교육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Massing, P., "Politische Bildung", in: Andersen, U./Woyke, W.(H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RD, Bonn: BpB, S., pp.433-442.

의미한다.³⁾ 국내에서는 한 국가사회가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 세계관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습득시키고, 바람직한 윤리적 규범을 내면화시켜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교육으로 보는 시각과⁴⁾, 한 국가가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포함하는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적 노력⁵⁾으로 보는 광의의 시각이 있다.

2) 정치교육의 기능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플라톤, 동양에서는 공자를 시작으로 저명한 사상가와 학자들이 정치질서의 안정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피히테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상으로 나라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이 정치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 실현이 정치교육에만 달려있는 것 또한 아니며 정치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연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교육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들이 정치교육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

- ① 정치체계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그 변혁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성향 내지 정치적 행위양식이 크게 관련을 갖는다.
- ② 국민들이 갖는 정치적 성향과 태도는 정치체계의 운영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③ 정치현상은 국민의 정치적 의식성향과 행위양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정치현상을 기구나 제도, 그리고 그 운영양식에 의해서 보다 국민의 정치의식 성향과 행위양식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게 된다.
- ④ 국민은 나라에 따라 정치지도자, 정치체제 및 구조 등에 대해서 각기 다른

3) 황병덕(1997), 독일정치교육연구,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p.272.

4)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시민교육, p.23.

5) 박용현(1984), 정치교육, 서울: 형설, p.16.

6) S.A.Renshon, Handbook&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pp. 5~9.

인식, 감정, 태도를 갖게 되며, 정치에의 참여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 ⑤ 정치에 대한 신념, 태도 등의 정치적 성향과 의식 그리고 행위양식은 학습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변화한다.
- ⑥ 아동기 내지 소년기의 정치적 학습은 오래 지속되며 성년기의 정치성향과 정치행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정치교육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자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교육의 담당체계는 일반적으로 정치사회화 구조인 가정, 동료집단, 지역사회, 학교, 교회, 직장, 사회단체, 대중매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 가정

가정이 의도적으로 시민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이 되는 기본적인 정신 바탕은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가정생활을 통하여 개인들은 어린시절부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태도를 터득하게 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인 정향이나 생활양식을 체득하게 된다.⁷⁾

많은 연구결과는 자식은 부모와 유사한 정치적 태도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놀라울 정도의 일치성은 정당의 선호도, 인종이나 종교와 관련된 특정한 정책, 사회적 일체성 등의 경우에 발견된다. 가정이 정치정향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⁸⁾ 그러나 정치적 신뢰나 효능감은 부모와 자식간에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정치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⁹⁾ 가정교육이 민주시민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¹⁰⁾

7) 신정현, 신용철, 권오정(1994),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서울:탐구당, p.52.

8) Richard E. Dawson, Kenneth Prewitt and Karen S.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2en ed., (Boston: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pp. 119~125.

9) Almond and Powell(1978), Comparative Politics:System, Process and Policy. p.89.

2) 학교

학교는 학생들의 정치적 정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공식적인 학과수업과 과외활동을 통하여 정치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공식적인 학과수업에서는 교과과정, 교실내 의식생활, 교사의 역할 등을 통해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진다. 학교는 국민의식과 국가관을 길러주는 매개체로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나 정치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시민교육적 역할과 특정한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 정치적 교화나 세뇌교육도 수행한다.

학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생활을 통하여 이해와 협력의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다. 학생들은 수업이외의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의사결정방법, 인간관계의 형성, 협력과 경쟁의 논리, 자치능력, 회의진행 방법 등 정치참여와 관련된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갖게 된다.

3) 사회단체

알몬드와 버바가 정치사회화는 유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및 성년기에도 지속되며 사실상은 후기의 경험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한 것처럼, 사회단체들은 그 구성의 취지나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에 따라 구성원들의 정치적 태도나 가치체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단체는 그 자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며 나아가 그러한 활동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일체감과 역할의식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단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중매

10) 김도수(1994), 사회교육학, 서울:교육과학사, p.182.

체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을 국민에게 전파, 배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를 조작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이나 시민적 자질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론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여론을 통해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정치교육의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Ⅲ. 독일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독일의 정치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교육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국가기구와 사회단체 등에서처럼 학교밖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정치교육의 대상은 학생을 비롯한 전국민은 물론 독일 거주 외국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교밖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은 정부의 각 부처와 그 부속기관들, 의회와 정당, 정당관련재단, 지방자치단체, 교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주체들은 국가기구와 비정부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기구에 속하면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로는 정부의 각 부처, 학교, 연방정치교육원과 각 주의 정치교육원, 시민대학, 군대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외에도 유적지보존사업과 기념사업회가 있다. 이들 사업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문화유산을 관리하여 관련자료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비정부기관으로는 각 정당과 정당관련재단들, 교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크리스찬아카데미, 언론매체 등을 들 수 있다. 각 교육주체마다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정보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 중 독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조직이 있다면 바로 연방정치교육원이다. 독일 정치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원과 비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정치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방정치교육원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 직업교육, 학교외 교육 등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과 국가에 의해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들이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 총괄기관으로서 독일 내무성이 관장하는 기관이며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연방하원에서의 각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유럽적인 사상을 독일 민족에게 확신시키고 보급시킨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몇 단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다. 전후 초기에는 구서독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이 주어졌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통일관련 정치교육이 병행되어 통일의 주역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90년 통일 후에는 구동독 주민들을 구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동화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통일과 더불어 연방정치교육원은 그 활동을 재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구동독 국민들의 정치적 정보에 대한 보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시민과 교육담당자, 도서관 및 학교에 많은 서적과 소책자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치교육의 최종소비자와 정치교육담당자에 대한 경험적인 요구조사도 실시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 정책에 관한 정치교육의 과제는 새로 정립되었으며 그 목표는 정신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독일 통일과정의 유럽적인 차원과 유럽통합에 있어서의 독일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신연방주의 국민을 위한 교육적 조치를 통하여 생활상태의 균등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수백개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다.¹¹⁾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위기에 직면하여 통일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심리적 동질화를 실현하고 동독주민을 새로운 사회질서로 통합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

11) 연방정치교육원은 내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내무부 자체는 의회의 소위원회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또한 학술위원회가 연방정치교육원을 상시적으로 감독한다.

시하였다. 이와 관련 서독지역의 주민들 역시 정치교육을 받았는데, 서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동서독 통합의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의, 서독지역 주민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각 주정부 산하에도 각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연방주립정치교육원이 있다. 주정치교육원은 주마다 상이한 설립조건은 물론 문화정책상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교육을 위한 물적 자원, 정치교육 담당기관간의 협조체제 형성, 다양한 정치교육 자료 발간,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정치교육원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비디오, 정치풍자극, 음악회, 전시회 등의 형식을 빌어 새로운 사유의 장과 무대를 개발하고 정치를 감각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며 또한 정치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에 식상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문헌 또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정당관련재단들

독일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교육은 정당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 산하의 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독일의 정당 산하 재단들은 특정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과 노선을 수용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들 재단들은 독자적인 재정구조와 인사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당과 연계된 재단으로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대통령인 에버트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재단이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진보적인 자유민주당과 관계된 재단으로 1958년 만들어졌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민주당과 관련된 재단으로 1964년 만들어졌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1967년 설립된 기독교사회주의연맹당과 관계된 재단이며, 하인리히 뵐재단은 독일녹색당을 지지하는 재단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로자 룩셈부르크재단은 구동독 여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의 노선을 따르는 재단이다.

이들 재단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신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이 재단들은 국고로 지원받은 돈을 그들 관련 정당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이들 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다. 다만 선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특정정당을 선전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가장 큰 담당자는 실제 유권자를 상대로 민주정치를 하고 의회와 행정부에서 통치를 담당하는 각 정당의 정치재단이다. 정치재단들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사례를 보면,¹²⁾ 재단의 과제는 정치교육 실시, 독일의 내부통합과 구동독지역에서의 기민당이 추구하는 정치노선에 대한 홍보와 선전, 정치에 대한 학문적 검토, 유럽통합과정지원, 국제대화의 촉진, 기독교적 이고 사회적인 운동에 대한 연구, 학문과 예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형식의 재정적 지원 등이다.¹³⁾

3. 시민사회단체

통일 이전에 서독의 시민교육은 정치분야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교육과 연수를 통해 민주적 인격형성과 독재나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경제분야에서는 검소와 절약 그리고 저축정신을 강조하고 경제의 안정성장을 촉구하며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경제와 산업의 사회성과 협동성을 불러 일으키고 재산형성의 평준화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사회분야에서는 청소년

12) 전득주외(1994),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박영사.

13) 현재 국내에 지부를 두고 있는 곳은 아데나워 재단, 나우만 재단, 한스 자이텔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다. △아데나워 재단은 1978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주요사업은 남북한 화해협력과정의 기여, 민주주의적법치주의적시민사회적 사회구조를 확고히 하는 데의 일조,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사회경제질서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소개하는 것이다.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 가치관과 원칙의 확산을 목표로 세미나와 국제회의, 출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지역분권화, 정치대화 증진과 개혁, 남북한 대화증진과 협력이다. △한스 자이텔 재단은 주요 사업으로 한반도 화해 프로세스 지원, 지방자치제도 발전지원, 여성의 사회 및 정치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도 국내에 지부를 두고,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사업, 노사관계 관련 협력사업,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 전반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윤리교육을 강조하여 사회질서와 공공의식을 갖도록 촉구하는 데 있었다.

서독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정치사회화하여 민주기반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전국민을 상대로 하여 실행하였으며 교육내용도 독일국민에게 민주주의식을 경고하게 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독일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며 정치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통일 이전에 서독이 행한 정치교육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에의 이해, 둘째, 역사상이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나치와 같은 극우파나 공산주의와 같은 극좌파에 대한 경계, 셋째, 독일연방국의 합법성과 현실인식, 넷째, 서독과 관계있는 주변 및 세계 주요국가들에 대한 이해, 다섯째, 유럽공동체 및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과 이해의 문제, 여섯째, 현재와 미래에 관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과 설계등이다.¹⁴⁾

독일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 외 정치교육은 주로 많은 수의 사회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수행된다. 연방정부는 독일 사회의 다원주의적 구조를 반영하는 이 사회단체들의 자율적인 교육적 조치를 장려하여 왔으며 후원의 전제조건은 교육담당 주체가 헌법의 기초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독일 정치교육의 근저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있다.¹⁵⁾

이같은 기본원칙 아래 크게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청년 및 성인의 정치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고, 강력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활발하다. 노동조합의 경우 정치교육의 주목적은 정치과정의 규정요인 및 기능구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치적 행위능력을 개

14) 권오정(1987),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pp.219~222.

15) 첫째, 정치교육은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즉, 가르치는 사람의 견해를 피교육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피교육자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논쟁적인 내용이 실제 교육에 있어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피교육자는 교육을 통해 현재 정치상황을 분석하고 이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합의는 통일이후에도 구동독에서 정치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발하는 데 있다. 독일 노동조합의 정치교육과 관련한 사례로 쾨닉스빈터노동자 센터를 들 수 있는데 이 센터는 기독교의 이념을 정치, 사회, 노동계에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기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전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청소년들도 참가할 수 있다.

교회에서의 정치교육은 참여자의 교육적 욕구와 부합되어 있으며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가 일반적 형태이다. 교회에서의 정치교육 관련 세미나에서는 제3세계 발전문제, 군축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 실업문제, 마약 및 청소년 문제 등의 시사문제가 주로 다루어진다. 교회 정치교육의 목적은 일반 정치교육의 목적과 동일하지만 과제의 경우 교회의 종교적 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통일 이후 모든 사회단체가 봉착한 어려움중의 하나는 구동독 주민들은 과거에 수십년 동안 겪었던 교화, 선동 및 선전 때문에 정치교육에 대해서 애초부터 상당한 정도로 불신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을 주관하는 사회단체는 어느때보다 대화의 자세 및 능력이 요구되었다.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사회단체 가운데 교회가 동독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교육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서독지역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동독지역에 결여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렸다.

동독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평가가 명백하게 연령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간이 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동일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 25세 미만의 사람들 중 43%는 자기 자신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연방시민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민주주의안으로 젊은 세대가 들어가면서 성장한다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동독지역 주민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일차적인 가치로서 자유의 가치가 바야흐로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¹⁶⁾

따라서 독일의 통일이후 정치교육의 관심사는 동독민과의 내적통합이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기 위해,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의 부족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참석자 또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독일은 정치교육에 있어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즉 연방정치교육원¹⁷⁾에서는 세미나와 학술대회, 포럼 등의 행사 개최, 특별교육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정치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및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교육교재 개발보급, 교육추진 단체의 지원, 정치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한 활동을 하며, 구체적인 정치교육의 실행주체는 주정부와각종재단, 지역조직 및 종교단체 등으로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에서 정치교육의 담당자이자 일차적 책임자는 국가가 아니라 독일 민주주의를 직접 운영하여 그로부터 혜택을 얻는 민주적 기관들과 단체들이며 정치교육의 주체는 시민자신이다. 왜냐하면 독일 정치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체제 그 자체의 강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공적인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고 자기 삶의 조건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줄 아는 자율적 민주시민의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시민들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정치교육 운영의 문제는 어떻게 정치교육의 목표집단을 확대하여 저변을 확고하게 하느냐하는 문제이다. 동서독 통일 문제는 이미 국지적 문제로 전화되어 지역의 문제로 특화되어 있다. 문제의 비중자체가 전 독일적 중요성을 상실한 것이다. 현재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사업으

16) 전득주, 페터마싱, 허영식(2006),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엠에드, p.285.

17) 연방정치교육원 업무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촉진과 정치참여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행사개최, 인쇄물,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을 써서 당면 현안과 역사적 주제를 파악한다. 광범한 범위에 걸친 연방정치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남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작사 회적 문제들과 비판적으로 대결하고 정치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동기와 능력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로는 민주주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층에 대한 정치교육의 방식과 내용 개발, 독일 인구의 20%를 넘어선 이주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다문화다민족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성 교육, 독일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유럽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문제 등이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이미 민족통일 단계를 지나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¹⁸⁾

IV. 한국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1. 정치교육의 현황

시민사회단체는 그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데 넓게 보자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의 모든 활동들이 곧 정치교육이라 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념·의제·활동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정치·경제·지방자치·문화·여성·인권·부정부패·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¹⁹⁾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 연수단(2008), 독일 정치교육의 현장을 가다,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 248~249.

19) 이러한 시민사회단체 이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구로는 선거연수원(<http://www.civicedu.go.kr>)을 들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직원과 선거관련 관계자 교육 외에도 중·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문화의 개선과 참여, 유권자의 의식향상을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교육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 전담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참여식 교수법과 같은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크게 민주시민교육과정, 민주시민발전과정으로 나뉘며 대상별로 교원연수, 대학생연수, 미래유권자연수, 일반유권자 연수, 여론형성층 연수, 기업체임직원 연수로 나누어져 있다. 교원연수는 민주시민교육과정직무연수, 대학생은 민

1) 한국YMCA전국연맹²⁰⁾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도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 민주시민지도력을 육성하고 주민의 참여·자치역량을 키우는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활동으로 지구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마을만들기 세미나,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모색을 위한 토론회, 청소년 신용경제교육, 청소년인권운동실무자 워크숍, 청소년경제교육센터, 청소년평화통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며, 이외에도 시기에 따라 유권자 정치교육 등의 이벤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YMCA의 활동과 아울러서 Young TV를 통해 캠페인 및 공모전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2) 크리스찬 아카데미²¹⁾

1965년 만들어진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로 기독교의 사회참여와 교회와 사회의 대화, 현대사회의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인간화를 표방하고 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운동의 발전과 정착은 독일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뮐러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아, 1960년대 중반의 급격한 사회변천의 파급 영향을 포착하여 한국의 지성과 정치풍토, 경제와 인간화, 노동문제와 매스컴, 교육과 청년, 영화와 성(性)의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대화모임’이라는 형태를 통해 소외와 갈등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는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재설립되어서 운영 중이다.

이질성이 심화되어가는 다원적 사회의 공생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른 소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종교적인 삶의 신학 콜로키움, 삶의 종교 대화모

주정치캠퍼스, 미래유권자연수는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 청소년 리더연수, 일반유권자연수에는 정치관계법 강좌, 새터민연수, 여론형성층에는 지역언론 관계자 연수, 시민사회단체회원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http://www.ymcakorea.org> 참조

21) <http://www.daemuna.or.kr> 참조

임이외에도 새헌법 조문화 위원회, 삶의 정치 콜로키움, 삶과 교육이야기 모임, 교육거버넌스 연구모임, 포럼 바람과 물, 오래된 새길학교, 대화지수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3) 노동조합 교육원

한국노총중앙교육원²²⁾은 21세기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과 균등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노총의 정책방향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넓혀 나가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노조간부 기본교육, 실무교육,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학생대상 영어캠프 등이 있다.

민주노총교육원²³⁾은 한국의 민주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총체적 학습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정규강좌, 열린강좌, 민주노총 노동대학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정규강좌로는 노조활동가를 위한 특별강좌, 여성주의와 문화, 노동안전보건강좌가 있으며, 열린강좌로는 참여형 교육기법 워크숍, 나를 찾아떠나는 여행, 집단예술체험, 인터넷 바라보기에서 참여로, 초보의 UCC동영상제작, 민주노총 노동대학에서 노동운동사, 자본주의이해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맞춤형교육으로 강사훈련, 교육기획훈련, 간부활동론, 노동자 자녀교육, 단식요가, 인간관계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4) 경실련²⁴⁾

1989년 창립되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조사연구, 시민조직, 시민교육, 홍보선전, 시민고발센터운영 및 법률구조,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행동 등이며, 특별기구로 경제정의연구소, 경실련 통일협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시민권익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두고

22) <http://ed.inochong.org> 참조

23) <http://edu.nodong.org> 참조

24) <http://www.ccej.or.kr> 참조

있다.

시민권익센터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운동,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소외되고 과소 대변되는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 서민적 삶과 직결된 실질적 생활개선운동을 통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권익 대변과 권리구제운동, 제도개선운동, 생활개선과 의식개혁운동,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한다.

도시개혁센터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목적으로, 도시에 대한 이해와 도시운동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설한 시민강좌로 도시대학(주민권리100%활용하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갈등해소센터에서는 사회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갈등의 합리적 해소를 목적으로 갈등조정사업, 갈등해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갈등교육사업 등을 한다.

이외에도 미디어 강사 교육으로 중등미디어 시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족화해아카데미에서는 통일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5) 참여연대²⁵⁾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이하 참여연대) 1994년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체입법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권력감시분야로는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가 있고 평화/연대/연구분야로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자치연대, 사회경제분야에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시민참여분야로 아카데미느티나무, 피플TV, 월간 참여사회, 참여연대이야기가 있다.

아카데미느티나무는 1996~2002년 참여사회아카데미에 이어, 2009년에 새롭게 오픈한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새로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

25) <http://www.peoplepower21.org> 참조

을 넘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일상의 행복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를 꿈꾸고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월요민주주의학교, 화요일인문학교, 평화학교, 굿모닝 세미나, 수요일전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설 연구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에서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다시 읽기, 교사 직무연수(시민교육, 교과서를 넘어) 등을 통해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6) 환경운동연합²⁶⁾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서울의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중심으로 8개의 지방환경단체들이 통합되어 탄생하였다.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어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 자연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환경교육센터, 월간 함께사는 길, 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들과 습지보전위원회, 에너지기후위원회, 바다위원회, 사막화방지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체계화연구, 지도자 양성, 네트워크 구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비롯하여 사회환경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대상 및 주제별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²⁷⁾ 찾아가는 생태환경캠프 교실, 세이브 에너지 디자이너 양성과정, 푸름이 국토대탐사, 환경체험프로그램, 어린이환경신문, 하천시민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환경동화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7) 한국여성단체연합²⁸⁾

1987년 21개 조직이 참여하여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 여성복지, 민주통일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다. 여성운동단

26) <http://www.kfem.or.kr> 참조

27) <http://edutopia.or.kr> 참조

28) <http://www.women21.or.kr> 참조

체 연대체로서 각 단체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민주평등평화를 핵심가치로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조직이다.

부설기구로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제연대센터, 대안사회연구소가 있으며, 정책기획위원회, 사회권위원회, 통일과 평화위원회를 두고 있다. 협력기구로 여성연합 후원회, 21세기 여성포럼, 한국여성재단 등이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풀뿌리 여성주민리더 교육, 풀뿌리여성 교육예산을 말하다 등이 있고 이외에도 여성운동상, 꽃보다여성운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8) 열린사회시민연합²⁹⁾

서울민주시민연합과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이 통합하여 1998년 창립되었다. 시민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3대 사업인 시민교육, 주민자치,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참여를 안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교육은 주민자치, 자원봉사와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성장과 삶의 방식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 내고 공동체정신과 연대정신에 기반한 가치관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이다.³⁰⁾

부설기관으로 해뜨는집사업본부,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를 두고 있고, 6개의 지역시민회가 있다.

교육내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개발,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관계훈련,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관계훈련,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비판의식과 합리성을 갖춘 사회인식, 사회공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활성화, 미래사회의 조망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新 워크숍, 주민자치리더십교육, 주민자치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계층별, 주제별로 실시하고 있다.³¹⁾

29) <http://www.openc.or.kr> 참조

30) 열린사회시민연합(2004),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교육 필드북, pp. 272-277.

31) <어린이교육>으로 인생설계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역사문화 답사 및 견학, 글쓰기, <청소년 교육>으로 리더십 개발, 인생설계교육, 직업체험교육, 의사소통훈련, <부모-주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³²⁾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건립 사업,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과 열람서비스 제공,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과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사업을 펼치고있다.

교육사업으로 민주주의 교육 관련 조사연구, 교재발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나가는 민주주의교육센터 기능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민주주의 연구서 발간, 학술대회 등을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프로젝트 시티즌 교사연수, 민주시민교육 주민아카데미사업,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등의 교육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용 영상물 제공, 웹진 희망세상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1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³³⁾

연대회의는 2001년 창립되었으며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주관한 낙선운동의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서 시민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상설 협의체이다. 연대회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 네트워크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서로의 발전을 격려·지원 하고 시민사회를 통제와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주의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익적 활동으로 운영되는 참여민주사회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설기구로 법제개선위원회,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지역정책협의회, 주민소환

부 교육)으로 부모역할교육, 부부워크숍, 자아성찰훈련, 민주시민교육, <가족교육>으로 가족미래설계교육, 가족자원봉사프로그램, 숲나무별자리 기행, <직장인 교육>으로 창의력 훈련, 의사소통훈련, 민주시민교육, <자원봉사자교육>으로 지역도서관 학교, 탈북 청소년멘토양성, 자원봉사일반교육 등을, <환경교육>으로 셋강 생태기행, 숲기행, 워터 캠프, 하천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공동체시민아카데미>로 인간의 이해, 사회변화의 추세 읽기, 미래사회의 조망 등이 있다.

32) <http://www.kdemocracy.or.kr> 참조

33) <http://www.civilnet.net> 참조

운동본부를 두고 있으며 필리핀에 아시아 NGO 센터를 두고 시민운동가들의 교육과 NGO국제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운동가 미디어교육, 비영리단체 회계관리자 교육, IT교육, 회원사업워크숍 등 주로 시민운동가 교육 및 정보교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11) 희망제작소³⁴⁾

진보와 보수의 틀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운동형 싱크탱크이다. 시민들의 창안으로 나온 사회의 온갖 의제들에 대해 연구와 실천을 함께하는 21세기 신실학운동을 목표로 2006년 창립되었다.

주요 기구로 뿌리센터, 사회창안센터, 대안센터, 공공문화센터가 있고 센터 산하에 부설 연구소들이 있다.³⁵⁾ 이외에도 독립부서로 해피시니어, 소기업발전소, 희망아카데미, 기후환경팀과 해외네트워크로 일본희망제작소가 있다.

주요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희망아카데미의 경우 공공리더들의 성장학교를 목표로 좋은 시장학교, 공무원학교, 의원학교, 지역리더학교, 공공디자인학교, 기후변화학교, 테마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희망모을 세미나와 토론회, 소셜디자인스쿨, 행복설계아카데미 등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및 강연들은 호프 TV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로 서비스되고 있다.

2. 정치교육의 한계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체험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

34) <http://www.makehope.org> 참조

35) 뿌리센터 산하에는 자치재정연구소, 조례연구소,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농촌희망본부, 주민참여클리닉이 있고, 사회창안센터에는 네트워크로 시민평가단, 서포터즈, 호민관클럽, 노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안센터에는 재난관리연구소, 국제팀이, 공공문화센터에는 간판문화연구소, 도시공간연구소가 있다.

나 한국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증대하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집단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또 그 활동이 성공적이었는지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³⁶⁾,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시민을 교육하는데 매우 적극적 혹은 적극적이었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60%가 그러한 활동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공공정책에의 영향력행사나 정부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비해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안팎으로 한계점을 안고 있으며,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시민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은 각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즉 보편타당한 내용이 아닌 단체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으로 경도되어 있다.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를 분석한 경우³⁷⁾,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교육은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자원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단체들이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이 자원동원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자원동원 목적의 시민교육은 시민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 보다 사업에 동원할 자원으로써 전제하는 것이기에, 시민단체는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의식을 갖추게 하여 자원화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 경우 시민교육은 시민단체의 틀 안에 시민의 잠재적인 성찰적, 참여적 자아능력을 제한하고 지적의식적 한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위에서 소개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시민교육이든 회원교육이든 교육 전담팀이 있는 경우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열린사회시민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희망제작소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를 진행하면서 함께 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시민교육 담당

36) 주성수 편저(2006), 한국시민사회지표, 서울:아르케, pp.186~187.

37) 김창엽(2006), 시민사회 분화기의 '참여연대' 시민교육 연구, 중앙대 박사 논문.

자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정체시키고 따라서 시민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교육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드는 시민교육의 한계는 자원부족이다. 시민단체가 가진 제한된 자원 때문에 시민교육에 대한 투자는 항상 뒤로 밀린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시급하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만으로 수익모델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사업에서만큰은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더불어 환경, 여성, 노동 등 각 부문별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은 물론 각종 지원기능을 수행할 중추적인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7년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결성하였으며³⁸⁾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분석,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활동,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양성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8년에는 전국 시민단체들간의 협의체로 시민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산하에 시민정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지도력 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담론 형성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자 중심의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민주시민교육포럼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 대한 단일법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의견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이다.

다섯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³⁹⁾ 이론적 개념

38) 민주시민교육포럼은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여성사회교육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학부모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YMCA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독일 아테나워재단이 후원하였다.

39) 한승희(2003),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드러내는 시민교육의 방향 정립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함양시키려는 시민성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전 한국지부장 마인아어두스(Dr. Ronald Meinardus)에 의하면, 한국 민주시민교육 실천상의 약점으로서, 민주시민교육 행사들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은 이유인 정치적 주제들에 대한 무관심, 행사들에 더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참여자의 수동적 역할, 그리고 행사참여자들이 스스로 그 이론적 지식들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전을 위한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의 결여를 들 수 있다.⁴⁰⁾

교육의 체화는 강좌 수강이후 학습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강좌 수강이후 자발적인 동아리 결성 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고, 일반사회에서의 사회문제들에 관련한 실천행동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도 교육대상자의 참여가 미흡하여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충분치 않다. 시민사회단체 스스로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내부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은 곧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특화되지 못한 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흡하고, 개별 단체 내부에서 집중력을 갖고 민주성, 시민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화두를 천착하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시민단체들의 전문영역을 찾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에 근무하는 활동가나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교육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교육 요구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⁴¹⁾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보면⁴²⁾, 첫째 교육

40) 한국민주시민교육 실천상의 약점, 한국민주시민교육원 교육자료, <http://www.cyber-democracy.com> 참조.

4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 연수단(2008), 독일 정치교육의 현장을 가다,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180.

프로그램의 내용의 경우, 개인성장·여가선용·가족생활 등 교양위주의 내용이 48.3%로 가장 많았고,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시민의식을 다룬 내용이 34.5%였다. 시민의식을 다루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사례들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이 초빙되어 환경의식·정치의식·소비자의식 향상을 위한 현실의 사회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⁴³⁾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의 실시목적은 지역 및 사회적 문제를 이해 혹은 계도(42.2%), 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배양(20.6%)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교육대상별, 수준별 다양한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의 빈곤, 이론과 규범론에 기초한 전통적 강의중심 교육방법의 한계성, 조직내부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확산효과 미비, 뉴미디어와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의 부재⁴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V. 결론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넘어, 시민의 생활원리로서의 내용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성과가 비가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 도외시되기 쉽다. 하지만 정치교육이 부재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있다.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정도에 있어 다른 어떤 변수들도 교육적인 변수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제한된 교육만을 받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다른 정치적 행동을 보인

42) 김민호 외(1999),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과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

43) 한국시민단체협의회(200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44) 소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홍보영상이었다. 단, 희망제작소의 경우 호프TV를 통해 세미나와 강연 동영상(총 120개)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는 것이다.⁴⁵⁾

에버트 재단의 정치아카데미 원장인 라인하르트 바일 박사도, 민주주의가 이미 정착한 상태에서도 정치교육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새로이 분투하여 획득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보살펴져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며 다음세대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생동성을 잃지 않으려면 민주주의의 후속세대는 민주주의를 학습해야 하며, 바로 거기에 정치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과제가 있다.⁴⁶⁾

독일은 일찍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학습주체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한편,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학교안과 밖의 교육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모델 사업들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정치교육의 그 자체의 자발성과 생명력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어떤 내용의 정치교육을 해야하는가를 국가기관이 결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정치교육이 무엇이라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제도화하는 것 자체가 정치교육의 원래목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치교육의 제도화에 있어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부분까지 제도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⁴⁷⁾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단지 교실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공교육의 교과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민전체를 상대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체제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간등록 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시기에도 순발력있게 강연회, 대화 씨클 등을 통해 정치교육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체화되어야만 한다. 참여없이 헌신없다는 말처럼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45)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1989), *The Civic Culture*, pp. 135~136.

4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연수단, 앞의 책, p. 245.

4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연수단, 앞의 책, pp. 87~88.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힘은 서서히,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에 정치교육은 학창시절에 끝날 수 없으며 우리는 학교 울타리 밖으로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정치교육은 지식습득을 넘어 생활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인생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제도화는 다양한 시민교육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 시민사회단체의 교육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정치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획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다.⁴⁸⁾

학교, 공공기관 등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들은 지금까지의 이론 중심의 고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까지 전개해 온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48)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교육진흥조례, 식생활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제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진흥조례,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오정(1987),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김도수(1994), 사회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민호 외(1999),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과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
- 김창엽(2006), 시민사회 분화기의 '참여연대' 시민교육 연구, 중앙대 박사 논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 연수단(2008), 독일 정치교육의 현장을 가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 박용현(1984), 정치교육, 서울: 형설.
- 신정현, 신용철, 권오정(1994),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 열린사회시민연합(2004),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교육 필드북.
- 전득주외(1994),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전득주, 페터마싱, 허영식(2006),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엠에드.
- 주성수 편저(2006), 한국시민사회지표, 서울: 아르케.
-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시민교육.
- 한국시민단체협의회(200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 한승희(2003),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황병덕(1997), 독일정치교육연구,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 Almond and Powell(1978),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1989), The Civic Culture.
- Massing, P., "Politischer Bildung", in: Andersen, U./Woyke, W.(H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IBRD, Bonn: BpB, S.
- Richard E. Dawson, Kenneth Prewitt and Karen S. Dawson(1977), Political socialization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S.A. Renshon(1977), Handbook of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http://www.ymcakorea.org>
- <http://www.daemuna.or.kr>
- <http://ed.inochong.org>
- <http://edu.nodong.org>
- <http://www.ccej.or.kr>
- <http://www.peoplepower21.org>

<http://www.kfem.or.kr>

<http://edutopia.or.kr>

<http://www.women21.or.kr>

<http://www.openc.or.kr>

<http://www.kdemocracy.or.kr>

<http://www.civilnet.net>

<http://www.makehope.org>

<http://www.cyber-democracy.com>

Abstract

A study of comparative approach of Korea's political education and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 Focusing on civil society groups -

Kim, Mikyung(Hope Institute)

This study shows role model case in political education of Germany system and political education of Korea civil society groups in current situation. Also this article want to know what is important matters of Korea political education.

Germany assists to promote political education of diverse civil society groups such as political foundation, church, labor union civil group. Korea is doing political education in formal educational process and informal and voluntary route such as national organization, civil society groups, mass media.

Germany builds systematical assistance scheme early and supply various institutional organiz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contents. on the other hand, Germany creates and supplies to act diverse model busines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education. Also Germany does not interfere with education contents for systematization in political education itself spontaneity and vitality. Germany doing political education lean on several organization like civil group, political party, labor union through citizen voluntary participation. These organization are evaluated with contribute quick response of seminar, group discussion in period of non preparation of educational policy.

Political education have to experience for life not in the knowledge

acquisition. As a result, political education must be accomplished by various party through whole life experience. Systematization have to assist diverse citizen education of civil group and combine their system. School and civil group education have to prepared legal and institutional base for systematical plan and management. Also local citizenship education is needed through local current issue concern in the local self- government. School and public organization have to escape from theory-oriented education and make an effort to change real world for understanding of real democratic principles. Civil groups have to reflect their activity and result from their beginning again.

[key words] Political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Civil society groups

